

“유죄면 434억 반환”-“아직 1심도 안끝나”

(조은희)

(김교홍)

**이재명 허위 사실 혐의 재판
행안위 국감서 여야 설전
노란봉투법·법인세 인하
상임위 곳곳서 공방 계속**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그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 ‘이재명 먹튀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비용을 차감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선 (선관위가)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가 (민주당에)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박했다. 김교홍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불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야당이 국회 통과를 버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임금노동자 2천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법을 놓고 왜 알가알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노동부는 이날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곳) 2천 752억 7천만원이 청구됐고, 법원은 이 가운데 49건 350억 1천만원을 인용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세계적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야당은 “대기업 편향”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인화 경쟁을 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라며 법인세 인

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약 80개 초(超)대기업이 4조 1천억원을 감세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 4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계 개편”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공방을 지켜보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은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유광준 기자 june@maeil.com

홍준표 “핵전략 전면 재검토해야” 유승민 “전술핵 재배치 美와 협상”

北 커지는 안보 위협에 대응 촉구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대북 핵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핵전 위협 사태는 세계 비핵화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고, 북한 핵전략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과연 북이 고도화된 핵력으로 미국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공격한다면 그때도 미·일의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 안전 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라며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다. 철저한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만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결연한 대응, 긴밀한 한미 공조’를 영문새처럼 되풀이한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고 7차 핵실험을 해도 마찬가지로 ‘말의 성찬, No Action Talk Only’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짓)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통원 기자 tong@maeil.com

여야 “낙탄 사고 철저한 조사” 한목소리

민주 “尹 정부 안보 공백 심각”
국힘 “엠바고, 무책임한 처사”

정치권은 5일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전남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날같이 보여준다”며 “완전한 작전 실패이며,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가 갔는데 군이 자체 대응하겠다고 막아섰다는 제보도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떨어지는 것은 국격만이 아니다”라며 “어처구니없고 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사고가 발생한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병기(兵器)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할 뻔했다”며 “재난조사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보도유예)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4일 오후 11시쯤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뒤 추락한 현무-2C 미사일은 발사지점으로부터 전방이 아닌 후방으로 약 1km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탄두가 발견된 곳에서 남쪽 약 700m 지점에 민가가 있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생산업체 등과 합동으로 낙탄 원인을 분석하고 ADD와 공동 주관으로 탄약 이상 유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maeil.com

尹에 친서 바이든 “열린 마음으로 IRA 협의”

“동맹 강화·공동목표 달성” 언급도
尹, 오늘 기사다 총리와 통화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한미 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백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솔직

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행정부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통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 또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친서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바이든은 이 친서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

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양국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동북아 평화, 그리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 사이 지난달에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얘기다. 김 수

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또 한국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향후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잇따른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 한미 양국이 외교장관, 그리고 안보실장을 포함한 모든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은 6일 기사다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aeil.com

꿈과 열정의 축구
상주에서 펼쳐라!

2022 상주컵

전국 유소년 클럽축구 페스티벌

대회기간

- 1차 대회 : 2022. 10. 8(토) ~ 10. 10(월) 3일간
- 2차 대회 : 2022. 10. 21(금) ~ 10. 23(일) 3일간
- 3차 대회 : 2022. 11. 11(금) ~ 11. 13(일) 3일간

장소 상주 중동강변 축구장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961-1)

문의 031)386-363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나각산 출렁다리 국제승마장

주최 칸 스포츠코리아 每日新聞 주관 칸 스포츠코리아 상주시축구협회 후원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시의회 상주시체육회